

여순사건 74년만에 첫 정부 추념식

19일 광양시민광장서 열려

특별법 시행·첫 희생자 결정 이어

유족 명예회복·진실규명 탄력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린다.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인정에 이은 행사에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 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최 행사로 열린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4·3 사건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고, 올해 1월 21일 시행됐다.

이제 첫 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지난 10월 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를 결정한 역사적 순간 직후라 희생자와 유족, 전남도민에게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념식에선 현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

연과 함께 여순사건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그림 전시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할 계획이다.

또 추념식 주간에는 전남도민이 여순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오페라, 문화예술제, 평화 포럼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추모행사가 지역별로 열려 여수·순천 10·19 제74주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합동 추념식은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라는 의미만으로도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의 주제처럼 74년 동안 흘려왔던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15일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열린 드론 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학동참사, 원청 관대한 판결” 국감서 질타

기동민 의원 “하청에 책임 떠넘겨”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지방법원이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측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구)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원청에게는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에게는 책임을 묻은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도 판결을 두고 시민들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사안과 책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법원장으로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있고,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가 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지난달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에게 각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 지역서 가장 높아

67%...서울 제외 전국 1위

정점식 의원 국감자료

소송구조제도 확충·홍보 필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지법의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이 67.1%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법률서비스 확충과 기존 제도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사법연감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열린 민사 1심 재판은 19만 5956건이다. 이 중 67.1%인 13만 1504건이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했다.

이 비율은 서울 5개 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서·남·북부지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18개 지법 중 6번째다.

광주지법 민사 1심 재판의 67.1%가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배경으로는 많은 소액 사건(소

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미만)과 변호인 선임료 부담(통상 최소 선임료 300만 원 이상), 법률 지식 접근성 증대 등이 꼽힌다.

같은 기간 열린 광주지법 형사 1심 공판 9만 2923건 중 43.1%(4만 85건)도 나 홀로 소송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법 중 대구·수원·인천·창원·부산·청주에 이어 7번째로 높다.

법원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불구속 피고인 중 상당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구술 변론주의, 법적 논리 등을 고려하면 나 홀로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소송구조제도·법률서비스 확충과 기존 제도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면제해주는 정책이다. 민사·행정·가사소송,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북구 136명 장학금 지급...28일까지 신청

광주시 북구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북구와 (재)광주북구장학회는 “오는 28일까지 북구 내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선발대상 인원은 고등학생 28명, 대학생 102명 등 총 136명이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에게 각각 50만 원, 전문대학생에게 30만 원, 종합대학생에게 200만 원 등 총 2억 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 장학생, 특기 장학생, 동행 장학생 등 4개 분야에서 신청을 받는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대학생으로 한정되며 2022년 1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7점 이상이어야 한다.

저소득장학생은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이 2022년 중위소득 65% 이하인 세대 고등학생은 2022년 1학기 성적 중 과반수 이상 과목이 5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이면 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학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1.8배 증가

지난해 693만kg...312만kg 늘어

지난해 광주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1인당 음식물쓰레기가 1년만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 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약 693만kg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312만kg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량으로 보면 14.8kg→32.8kg로 약 1.8배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해 급식이 증

단됐다 다시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음식물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분석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만큼 처리 비용도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7억여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5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12억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